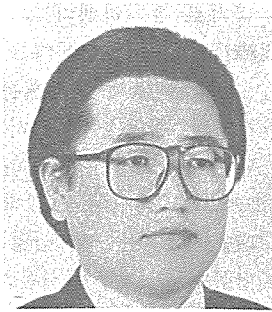


科學技術진흥과 政党 및 國會의 역할

“ 과학기술 重視하는 政党·議會文化 뿌리내려야 ”



柳 峻 相

〈國會經濟科學委員會 위원장〉

◇ 과학기술과 정치의 상관관계

科學技術이 政治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科學技術은 항상 政治시스템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새로운 양상을 창출하고 있다. 즉, 정치는 공공 문제의 해결과 인간의 지배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科學技術의 발전은 그 公共問題의 성격을 변질시키거나 새로운 類型의 公共問題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國家政策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政治構造와 방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째, 世界的 碩學「러셀」(Russell)이 그의名著 “科學의 社會的 影響”(The Impact of Science on Society)에서 역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科學은 17세기 中葉以來 識者들의 신념을 형성하여 왔고, 18세기말경부터는 經濟成長의 주요원동력이 되어왔다. 또한 1987년에 노벨 經濟學賞을 수상한 바 있는 美國MIT대학의 「솔로우」(Solow) 教授는 “國家經濟가 成熟段階에 접어들면 경제 성장은 전적으로 기술진보에 따라 결정된다”라

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科學技術은 國家經濟의 발전 및 國民의 생활양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科學技術의 진흥은 國家 政治目標의 주요내용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둘째, 科學技術의 발전은 새로운 社會問題를 야기시키고 있다. 산업의 발전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화, 컴퓨터 이용의 증가에 따른 사생활 자유에 대한 위협, 자동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하여 실업이 증가되리라는 사회적 불안,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에 수반되는 방사선 피해위험의 증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와같은 科學技術發展의 부작용은 인간생활의 질적수준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政治的 爭點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셋째, 科學技術은 國際政治의 位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이 國際社會에서의 “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기술경쟁에 가장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승리하는 국가와 민족만이 世界市場을 석권할 수 있으며, 未來의 強國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최근에 歐美諸國이 物質特許와 소프트웨어 등 知的所有權에 대한 국내 보호를 무역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尖端宇宙武器體系 技術開發事業(즉, SDI project)이 결과적으로 소련과의 전략핵무기감축협상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열쇠였다는 것 등에서 과학기술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政治問題가 반드시 과학기술과 연결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科學技術은 현실적인 國內外政治生活의 重要내용을 결정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政治가 科學技術에 미치는 영향

科學技術은 그 屬性上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만 활성화될 수 있지만, 그 과학기술을 창출해 내는 研究開發事業은 정치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연구개발사업에는 대단히 높은 기술적이고 시장적인 불확실성이 수반되며, 연구문제에 대한 투자에는 「費用便益分析」이 적용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科學技術專門家들에 의하여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개발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설사 研究開發事業計劃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일도 자주 통상적인 행정적의 한계를 초월하게 된다.

따라서 國家的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거액의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연구개발사업은 政治圈內에 수용되어 정치력에 의하여 결정되고 지원될 때, 비로소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강조되어야 할 점은 탁월한 영도력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정치지도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보좌관들과 많은 전문가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宇宙研究戰略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던 「케네디」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없었다면, 1971년 3월 미국의 「아폴로」우주선이 인간을 달에 착륙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당 및 국회의 과학기술진흥 현황

政黨의 科學技術振興 政策現況

선진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의 진흥이 각 政黨의 重要政策內容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각 정당에서는 중요 科學技術政策意志를 총선공약에 포함시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 예시로서, 政黨政治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 있어서 각 執政黨이 제시하였던 總選公約을 요약해 보면 첫째, 1959년 總選에서 保守黨은 “重要技術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함으로써 영국을 위대하고 앞서가는 국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하여 科學長官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1964년의 總選에서 勞動黨은 산업기술의 개발과 첨단기술의 활용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그 구심체로서 技術省을 신설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1983년의 總選에서 現職首相 「대처」가 이끄는 保守黨은 정보산업기술개발, 대학과 산업의 협동연구 등에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같은 公約들은 당시 영국이 처해 있었던 국내의 여건에 가장 적합한 政策代案으로 평가되었고, 그리하여 각 政黨이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科學技術振興에 대한 정당의 시각이 선진국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례를 1987년 12월에 실시되었던 大統領選舉過程에서 살펴보자. 당시 4대 主要 政黨에서는 화려한 청사진으로서, 民主正義黨에서는 「執政基本綱領 10章」을, 平和民主黨에서는 「5대 綱領」과 「7대 基本政策」을, 統一民主黨에서는 「10대 綱領」과 「8개 分野 基本政策」을, 그리고 新民主共和黨에서는 「10대 綱領」과 「6대 基本政策」을 각각 국민 앞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科學技術의 振興이 앞서 살펴본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우선적이고 구체적인 政綱政策으로는 제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第6共和國政府가 수립하였던 「中期財政計劃」에

서 과학기술진흥의 우선순위가 최하위로 밀려났다는 현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國會의 科學技術振興 現況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선진국에서는 議會에 科學技術業務안을 전담하는 常任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議會의 노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科學技術委員會는 중요 과학기술현안 문제에 대하여 深層調査·分析한 후, 국가적인 과학기술진흥목표와 방안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先進國 議會의 동향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美國이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최초의 宇宙船(sputnik호)을 발사하는데 성공하였다. 소련에 의한 우주탐험의 역사적 출발은 自國의 科學技術優位를 과신하고 있었던 美國國民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이 사건은 美國政界에 중대한 「잇슈」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議會는 上院과 下院에 새로운 과학기술관련 特別委員會를 각각 설치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는데, 1958년 2월 6일 上院에 설치되었었던 「宇宙·航空 特別委員會」와 1958년 3월 5일 下院에 설치되었던 「航空·宇宙開發 特別委員會」가 그 효시였다. 지금은 下院에 「科學技術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다. 同委員會는 1986년 3월부터 1987년 9월까지 총 24건에 달하는 主要科學技術懸案問題에 대하여 활발한 聽聞會를 개최할 만큼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걸음 나아가, 美國議會는 議會의 독자적인 과학기술전담조직으로서 「技術評價局」을 1972년 10월에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각종 과학기술정보를 스스로 공급받고 있다.

둘째, 英國의 議會도 1966년 12월 14일 平民黨(House of Commons)에 「科學技術特別委員會」를 常設로 실시하였다.

同委員會를 설치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의 하나는 科學技術分野에 있어서 行政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議會의 권위를 회복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79년 6월에 단행되었던 議會委員會制度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의하여 同「科學技術特別委員會」는 貴族院(House of Lords)으로 옮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同委員會는 1966년 설치된 이래 1985년까지 총 56건에 달하는 科學技術政策課題를 발굴하고 關聯政策代案을 本會議에 보고한 바 있다.

세째, 가까운 日本의 議會도 독립된 「科學技術委員會」를 1980년 9월에 설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議會는 과학기술분야만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의회의 기능을 동시에, 同分野에서 行政府에 필적할 정도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은 先進國의 議會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國會는 「經濟科學委員會」가 經濟企劃院과 科學技術處의 소관사항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다. 현행 經濟科學委員會가 설치되었던 제8대 國會 이전에는 科學技術處 所管常任委員會가 자주 바뀌어 왔던 점, 그리고 특히 금년 6월 15일 全文改正된 새로운 國會法에서 行政委員會, 動力資源委員會, 勞動委員會 등 3개 常任委員會가 분산·증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科學技術을 전담하는 科學技術委員會의 설치논의가 論議에 그쳤던 점들은 우리나라 國會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아직도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된다.

◇정당 및 국회의 과학기술진흥

또한 政府의 현실을 볼 때, 최근 과학기술의 진흥은 「科學技術處」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많은 部處의 중요기능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國會의 經濟科學委員會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科學技術處」업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政府 전체의 과학기술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政黨 및 國會의 役割期待

가. 政黨의 役割期待

첫째, 과학기술의 진흥은 정당의 핵심적 기능으로 수용되고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政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政黨法 第2條), 그 기본지침이 되는 일정한 강령 즉, 정강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과학기술의 진흥은 그 政綱의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政黨은 과학기술의 진흥에 있어서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의 과학기술지향적인 의식을 조장하고 선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지 못하여, 과학기술지향적인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의 지도자들은 과학기술의 진흥에 대한 정치철학을 뚜렷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깊은 관심을 국민 앞에 표명해야 할 것이다.

나. 國會의 役割期待

기본적으로 國會는 憲法에 의하여 國會에 부여된 立法權, 財政權, 國政監視·批判權을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憲法 第27條 第1項의 立憲意志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國會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몇가지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國會는 1986년 현재 국민총생산량의 1.99%에 머물고 있는 과학기술투자를 1991년까지는 국민총생산의 3%, 그리고 2001년까지 5%로 확대시키려는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민간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유인제도를 보완·발

전시키고, 정부에 대하여는 國家全體豫算의 적정부분이 과학기술분야에 배분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와같은 國會의 기능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豫算編成方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國會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편중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科學技術行政專擔部處에서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관계 예산안을 국가발전목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國會에 제출해야 될 것이다.

둘째, 國會는 政府로서는 간과하기 쉬운 과학기술발전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關聯立法活動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國會는 地域間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이라는 인자를 최대로 투입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야 될 것이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중심으로 東南圈은 浦項, 西南圈은 光州를 첨단과학기술단지로 개발해야 될 것이며, 이들 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운집될 수 있도록 關聯法律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력한 特別法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째, 國會는 과학기술이 國會議員의 개별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하여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안정되고 자유로운 토양에서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國會의 과학기술진흥 노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정보제공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民主主義는 政府에 대하여는 가장 나쁜 制度”라고 하였던 「처칠」(Churchill)의 지적을 감안해 볼 때,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國會의 개입은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가 있으나, 國會의 활발한 활동은 오히려 국민전체와 과학기술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確信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과학기술도 국가안보와 마

찬가지로 興와 野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여, 차제에 현재 興黨과 政府間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黨·政協議會 制度」가 國會의 차원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되면 國民의 대표로 선출되어 國民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國會의 견해, 그리고 정부의 경험과 기획력이 事前的으로 조화롭게 융합됨으로써,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制度的 裝置의 強化方案

가. 政黨의 制度的 裝置 強化方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科學技術은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각 政黨은 科學技術界人士가 참여하는 「科學技術諮問團」을 구성함으로써 필요한 기술적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나. 國會의 制度的 裝置 強化方案

國會의 科學技術關聯機能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國會法 改正過程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앞으로 國會內에 별도의 「科學技術委員會」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同委員會가 설치될 경우에는 科學技術政策의 결정과정이 보다 합리화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진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크게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國會와 政府의 力學關係側面에서 고려할 때, 앞으로 필연적으로 科學技術行政專擔部處가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차후에 國會에 「科學技術委員會」의 설치를 검토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同委員會의 기능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학기술 연구개발목표의 설정,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장애요인의 검색, 科學技術關係 豫算水準의 결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同委員會의 소관업무는 「行政組織」이 아닌 「機能」의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 科學技術處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部處의 과학기술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포괄하여야 될 것이다. 즉 科學技術處의 모든 업무, 商工部의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特許廳의 지적소유권 업무, 遞信部의 정보통신기술업무, 國防部의 국방연구개발업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 하겠다.

세째, 同委員會가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도출·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산업계·학계·과학기술계, 그리고 국민대중으로부터 광범한 여론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개별적인 의견 조사에 의할 수도 있으나 현행 國會法에 새로 도입된 「聽聞會」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도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公聽會」를 개최함으로써 정책대안의 충실과 더불어 國民啓導의 효과도 함께 꾀해 나가야 될 것이다.

네째, 同委員會는 과학기술정책이 형성되는 전체적인 과정의 민주화에 주안을 두는 한편, 委員會의 議事錄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 결 론

지금까지 科學技術의 진흥과 政黨 및 國會의 역할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하였다. “오늘의 현실은 모두 어제의 꿈”이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각계의 논의의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나날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政治現實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시일내에 科學技術의 振興을 중시하는 政黨文化와 議會文化가 이 땅에 뿌리 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지금 소위 「3高」라고 불리는 새로운 經濟問題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세계의 先進經濟國으로, 그리고 環太平洋時代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科學技術界를 비롯한 各界各層의 보다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노력을 기대한다.